

# “다양한 의견 수렴 가능 다당제 선호” 65.0%

### 한국당 지지층 중 48.7% “양당제 선호”

#### 문화일보 창간 여론조사

1일 문화일보의 창간 여론조사에서 바람직한 정당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당제”를 꼽았다. “양당제”를 선호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다당제라고 응답한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오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어떤 정당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5.0%의 응답자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라고 답했다. “정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양당제”

를 꼽은 비율은 29.4%에 달해 응답자 대다수가 다당제를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의당 지지층 가운데 82.6%가 다당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른정당(69.3%)과 국민의당(61.1%) 지지층에서도 다당제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68.1%가 다당제를 지지한다고 밝혀, 양당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27.3%)의 두 배 이상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48.7%가 양당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다당제라고 답한 비율(44.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지난달 30~31일 19세 이상 남녀 표본 103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우선 32.5%, 무선 67.5%, 응답률 : 11.2%)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재발생시 대피 이렇게” 광주 동구청은 1일 지하철 소태역에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동구청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14개 유관기관 및 단체,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소태역 화재발생을 가정한 실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광주 동구청 제공>

##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복당 확정

강진원(사진)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복당 심사 3번째만에 복당이 허용되면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제2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군수를 비롯한 526명을 대상으로 복당 심사를 벌여 강 군수를 포함해 419명의 복당을 허용했다. 나머지 106명은 보류하고, 1명은 불허 처분했다. 자격심사위원들은 강 군수가 당헌·당규상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 복당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앞서 2차례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한 뒤 탈당한 것에 대해 추가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복당이 보류됐다. 하지만 전남도당 안팎에서는 강 군수와 함께 복당 신청을 했던 김성 장흥군수와



경우 한차례 보류 후 입당을 허용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강 군수의 복당 허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지난 5·9대선을 앞두고 중앙 당 고위 당직자가 비공식적으로 “무소속 단재장들의 복당과 입당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강 군수의 복당 허용이 예견됐다. 강 군수의 복당으로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은 15명으로 늘어났다. 전남도당은 김종혁 보성군의원, 장재호 전 진도군의원, 주창배·전승철 전 신안군의원 등 4명도 복당을 허용했다. 그러나 김관선 전 광주시의원(신안)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시의회 정례회... 시교육청 추경 등 심사

광주시의회(의장 이은방)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최식을 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 2018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이 밖에도 25건의 조례안 심의와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보고한 5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날 개최식에서 광주시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5·18 진실 규명, 아동수당 국비 지원 등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오섭(북구2)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광주공약이 100%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특히 5·18 진상규

명과 명예회복이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시급한 아동양육수당 복지예산의 전액 국비화, 시민총회를 통한 광주시 시민참여 예산 결정, 4차 산업혁명과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토론 협력, 문화전당 정상화, 고교 무상급식 전 학년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자치구 경제조정 해결 등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민중(광산4) 원내대표는 “윤 시장이 협치의 시정철학을 강조해 왔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소통 부재, 일방통행식 시정, 코드인사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광주시정이 개인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일부 시장과 친분 있는 인사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자동차·에너지·4차산업 등 성과 났지만...

### 광주형 일자리 현실적 사업 우선 시행돼야

#### 윤 광주시장 공약이행 평가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제시

자동차, 에너지, 4차 산업 등의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내고 있는 윤정현 광주시장이 정작 시민으로부터는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시민시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공약 평가 시민배심원단은 ‘8건의 공약 조정’에 대해 7건을 승인하고, 1건은 사업 폐지 의견을 냈다. 이번 공약 이행 평가에서 ▲민주인 권평화콜플렉스 조성사업 ▲민주인 권평화센터 내 평화연구소 설치 ▲광주전 지원 복원 프로젝트 등 7건의 공약은 일부 사업 내용을 조정해 추진하라는 평가를 내렸다.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뱅크 운영’ 공약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중

복 사업으로 폐지 의견이 나왔다. 윤 시장의 12개 공약에 대해서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 예산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 관련 구체적 데이터도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배심원단은 청년 인턴 확대, 공정한 선발 기준 등 현실적인 사업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공약을 평가받는 것은 공약 이행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과정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무작위로 광주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우선 100명이 선발됐고 이후 성별과 나이, 거주지 등을 고려해 56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장애인 고용 비율 광주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매년 높아졌지만 민간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015년 4.31%에서 지난해 4.53%, 올해 4.57%로 소폭 올랐다. 반면, 지역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말 기준 3.37%에서 지난해 말 3.

25%로 오히려 줄었다. 공공기관만을 비교할 때 광주시는 매년 줄었지만 자치구는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2015년 4.61%에서 지난해 4.35%, 올해는 4.17%로 계속 낮아졌다. 동구 등 5개 자치구는 4.15%에서 4.63%, 올해는 4.78%로 높아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의회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빨리 확정을”

전남도의회는 1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57명 전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기획재정부의 근시안적 경제 논리로 진척이 더디다”며 “무안공항 경유를 반대한 채 기존선 개량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 핵심 정책 기조인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서남권 이용객

편의 도모,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무안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이 필수 조건”이라며 무안공항 경유 노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윤시석 의원은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 건설은 경제성을 생하기 전에 미래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신성장 축으로 삼아 서남해안권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1호

## 부분마취! 최소절개! 단기입원!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허리와 목 질환의 15년간 임상 경험!**  
척추, 관절, 골절, 정형외과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